

‘전북 중기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하자’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도내 중기 인력난 해소 위해 제안

“지역 차원에서 근로자복지 정책 지원 확대”… 제도 마련 등 제시

전북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임금과 복지 수준의 격차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전북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28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중소기업은 전북경제의 중추이지만, 열악한 임금·복지 수준 및 근로환경으로 인해 구직자의 외면을 받고 있다”며 “지역 차원에서 ‘근로자복지기금 조성’ 같은 지역 근로자복지에 대한 정

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단위 근로자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선결과제로 전북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관련 제도 마련,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복지 실태 및 수요 파악, 근로복지제도 운영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제안했다.

첫째,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관련 조례’는 전북 중소기업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근로복지정책 수립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한 ‘전북특별자치도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2가지가 제안됐다.

둘째,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복지 실태 및 수요 파악’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과정으로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증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셋째, ‘법정의 복지제도 운영 중소기업 인센티브 지원’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법정의 복지 차이는 공공의

자원 노력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매우 중요하므로 정부 및 지자체가 다양한 정책과 연계해 참여기업에 종합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책임 맡은 김수는 책임연구위원은 “기업의 복지제도는 임금효과를 더 해 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용의 질을 높이고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북형 좋은 일자리 창출의 첫걸음으로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마중물로 삼아 지역 중소기업 근로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도민·공무원

우수제안 14건 최종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테마제안 공모에서 최종 14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도는 지난 2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도민·공무원 테마제안 공모 본심사’에서 도민 부문 6건, 공무원 부문 8건을 최종 우수 제안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민 부문 대상은 ‘전북 도내 음식점과 잔반제로 인증제, 고령·1인가구 기부 및 세제혜택 제공’ 제안이 선정됐다. 제안은 음식점과 협약을 맺어 유통기한과 위생 기준을 충족한 잉여 음식을 푸드뱅크와 연계해 고령·1인가구에 기부하고, 인증업체에는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음식물쓰레기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 효과까지 기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무원 부문 대상은 ‘머무는 공직, MZ 이어드림(dream)’이 차지했다. 도내 공무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해 직원 간 교류를 확대하고, 선·후배 간 멘토링을 강화하며, MZ 세대 공무원의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전략적 제안이다.

도는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14건의 정책제안들을 관련 부서의 검토 및 보완, 구체화 과정을 거쳐 도정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법안 국회 통과… 논란은 여전

내년 3월부터 초·중·고교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줄이고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조정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재서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장애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이나 교육 목적, 긴급 상황 등은 예외로 허용했다.

또한 학교장과 교사는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교내 스마트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로써 그동안 지침이나 학칙에 의존해 오던 스마트폰 사용 규제가 법률로 상향됐다.

다만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일부 의원들은 “자율적 조정의 여지를 없앤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고, 청소년 단체들도 “학생들의 의견을 배제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전문가들 역시 “학칙 운영에 따라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선언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 체육회장인 박지원 변호사가 2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당원이 길이 되는 정당 만들 것”

박지원 전주시체육회장, 민주 평당원 최고위원 출마 선언

30대의 젊은 변호사이자 전주시 체육회장인 박지원 변호사가 28일 더불어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 회장은 “지도부가 길을 내는 정당이 아니라, 당원이 곧 길이 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출마 의지를 밝혔다.

익산 출생으로 상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41기로 졸업한 박 회장은 판사나 검사의 길이라는 편안한 길을 포기했다. 그 대신 고향 전주 만성로에서 법무법인 ‘다지원’이라는 상호로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대표변호사가 되었다. 14년간 서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에 헌신하며 힘없는 서민들의 ‘친근한 벗’으로 살아왔다고 자평했다.

그는 전국 228개 체육회 중 35세의 나이에 전국 최연소로 전주시 체육회장에 당선되며 주목받았다. 또한 지역 시사 방송을 100회 이상 진행하며 민심과 당심의 괴리를 직접 체감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이 제시한 평당원 최고위원 선거 출마 공약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당원 참여 확대. 최고위원회의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당원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른 형성위원회를 설치해 국민·당원·전문가가 함께하는 공론장을 상시 운영하겠다고 계획도 내놨다.

둘째, 공천 제도 혁신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민 공천배심원단 도입, 결선 투표제 시행, 청년·여성·장애인 등 소수 계층에 절반 가까운 기회 보장을 약속했다. 공천 평가는 ‘현장 활동, 정책 역량, 윤리’ 세 축으로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더불어민주당의 ‘스타트업 식’ 정당 운영이다.

분기별 ‘정책 해커톤’을 열어 당원들이 직접 정책을 기획하도록 하고, 공천과 재경 등 당 운영 데이터를 전

면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계파도, 댁병도 없는 제가 도전하는 이유는 당의 변화에 대한 갈망 때문”이라며 “민심과 당심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민주당을 반드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고위원에 당선된다면 본업을 내려놓고 상근 체제로 활동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박 회장은 현재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상임대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번 평당원 최고위원 선거는 정청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공약에 따라 처음 도입된 제도다. 오는 9월 5일부터 6일까지 배심원단 심사를 통해 3~5인의 최종 후보군이 압축되고, 9월 9일에는 후보자들의 토론회 및 합동연설회가 열린다.

최종 선발전은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전당원 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당선자는 9월 11일에 발표된다.

전북에서 시작하는 박 회장의 야심찬 도전이 더불어민주당의 세대교체와 혁신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만호 기자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내란특별재판부 설치하자”

민주 특검특위 “납득 어려워… 구속영장 재청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하며 “보강수사”, “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또 강경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가 나왔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이번 결정을 깊이 우려한다”며 “(특검은) 보강수사 후 영장을 반드시 재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특위는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라는 헌정파괴 행위 앞에서 국무총리라는 국경 2인자가 한발을 지키기는커녕 내란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는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법원은 이번 기각으로 내란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을 향해 “이번 결정에 주저하지 말고 보강수사 후 영장을 반드시 재청구해 내란 공범 세력

의 범죄를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 소속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면담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도 행안부와 연계해서 비상계엄 당시 청사 폐쇄 등 적극 동조한 지자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점을 감안해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특별재판부를 즉시 설치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는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운 의원은 같은날 페이스북에 “한덕수를 기각하면, 부총리 최상목 이하 수사를 하지 말라는 뜻인가. 이러니 국민의 분노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요구로 분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국가 다음 도약, 자율주행에 달렸다”

김윤덕 국토부장관, 자율주행 기업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

“규제 연내 정비… 성장 대표 사례 자리매김토록 의기투합”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미래모빌리티센터를 방문해 무인 자율주행차 시승하고, 자율주행 기업 대표들을 만나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김 장관은 “계파도, 댁병도 없는 제가 도전하는 이유는 당의 변화에 대한 갈망 때문”이라며 “민심과 당심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민주당을 반드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고위원에 당선된다면 본업을 내려놓고 상근 체제로 활동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박 회장은 현재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상임대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번 평당원 최고위원 선거는 정청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공약에 따라 처음 도입된 제도다. 오는 9월 5일부터 6일까지 배심원단 심사를 통해 3~5인의 최종 후보군이 압축되고, 9월 9일에는 후보자들의 토론회 및 합동연설회가 열린다.

최종 선발전은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전당원 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당선자는 9월 11일에 발표된다.

전북에서 시작하는 박 회장의 야심찬 도전이 더불어민주당의 세대교체와 혁신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지역 재생에너지, 해당 지역에 우선 공급

민주 이원택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안 대표발의

송전선로 건설 따른 갈등 예방·RE100 기업 유치 촉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은,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자원을 해당 지역 내 전기사용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지역 갈등을 예방하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RE100 기업 유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전북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이 집중되면서 전력계통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 등 원거리로 송전하기 위해 송전선로를 추가 건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지역 주민과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현행법은 재생에너지 전기를 해당 지역에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하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계통 혼잡과 송전선로 건설 문제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전기공급 사업자와 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력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설비가 위치한 지역 내 전기사용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낙후된 지역에 RE100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내 생산·소비 연계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송전선로 건설 관련 사회화 갈등을 줄이고, 지역 내 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전력계통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